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실태와 정책과제

School Violence and Policy Issues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지난 몇 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그 수준이 점차 저연령화, 심각화되고 있다. 신종 학교폭력 유형이 등장하고 피해학생들의 빈번한 자살은 학교폭력이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이르는 심각한 사건이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폭력의 실태를 분석하고 최근 정부가 제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살펴 본 뒤, 이에 대한 한계점을 짚어보았다. 이를 통해서 학교폭력의 문제가 교실 안 권력관계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병리적 문제로서 다루어져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전략 마련을 위한 단초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서론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왕따,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아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학교 폭력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 폭력을 잠재우기에는 이미 너무 문제가 편만해져 버린 면도 없지 않다.

국민 소득 3만불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생의 수업일수, 방과후 사교육 등이 세계 최대인 우리 사회에서 학업 스트레스 등에 못 이겨서 스트레스를 폭력으로 풀고 있는 우리 차세대들을 보면서 여러 정부의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당혹감

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등과 같은 임기응변적인 대책으로는 끝나지도 끝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차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폭력의 실태와 최근 정부가 제시한 대책을 살펴 본 뒤, 이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이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학교폭력 실태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학교 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2조1호)를 말한다²⁾.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따돌림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루어는 괴롭힘도 포함된다.

본 절에서는 우리 사회 학교 폭력의 발생율, 유형, 발생시기 및 장소, 가해행동의 원인 및 피해학생 처분, 피해학생의 대처, 목격 학생의 대응 등 학교 폭력의 주요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1) 학교폭력 발생율

2010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율 및 가해율은 11% 이상으로 감소되지 않는 양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초·중·고 재학생 720만명 중 피해자는 70만명 정도이며 재학기간 동안(누적)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전체

(3,560명)의 22.6%로 나타났다. 반면 가해경험은 20.9%로 조사되었다.

표 1.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율 및 가해율

(단위: %)

연도	피해율	가해율
2006년	17.3	12.6
2007년	16.2	15.1
2008년	10.5	8.5
2009년	9.4	12.4
2010년	11.8	11.4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06, '07, '08, '09, '10)

2) 학교폭력 유형

최근의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행, 언어폭력 외에도 졸업뺑³⁾, 계급문화, 뺑서들⁴⁾과 같은 신종 학교폭력이 등장하였으며 정보통신기계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초·중·고생 1,2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놀림·욕설·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왕따 여학생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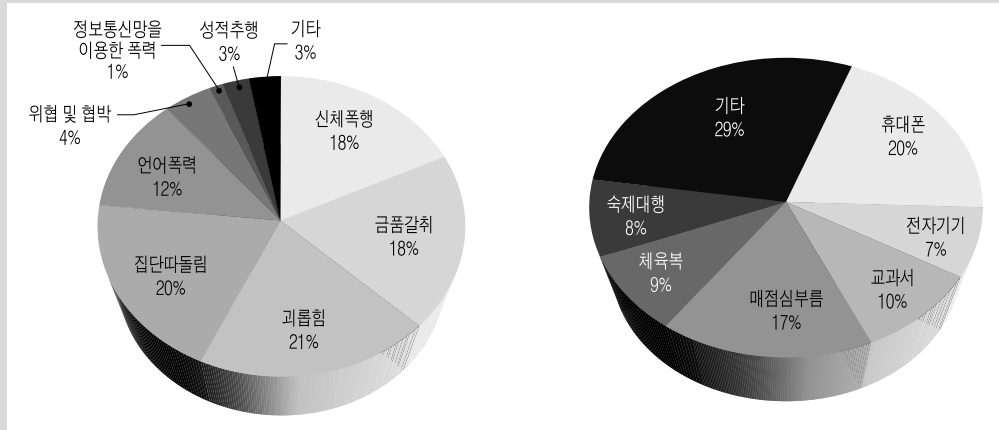
1)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주로 참조하였음.

2) 인터넷 법제처(20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2조1호(<http://www.moleg.go.kr/>)

3) 졸업뺑은 대한민국 졸업식의 뒤풀이로, 주로 선배가 졸업하는 후배를 괴롭히는 행위임(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4) 뺑서들은 자신보다 힘이 센 학생들에게 강요당해 뺑을 사오는 등의 잔심부름을 하는 학생이나 혹은 그 행위 자체를 일컫는 말임. 특히 ‘셔틀’은 중·고등학교에서 힘센 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뺑이나 담배 등을 대신 사다 주거나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행위나 대리로 시험을 쳐 주는 행위,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대한민국의 신조어로, 2008년에 학교 폭력을 배경으로 탄생한 용어임(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그림 1. 학교폭력 발생유형 및 괴롭힘 종류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 학교폭력! 유·초등학교 단계부터 조기예방 강화

뿐만 아니라 폭력이 지속화, 집단화되어 처음 가해한 학생이 보복 폭행을 하거나(44.0%), 처음 가해한 학생이 친한 주위 학생과 함께(33.4%)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높았다. 또한 학교 폭력 피해학생 중 66.2%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가해학생의 수가 6명 이상인 경우가 16.3%에 달했다.⁵⁾

3) 학교폭력 발생 시기 및 장소

학교폭력 피해시기는 주로 초등학교 때 처음 피해를 겪은 경우가 많아 최초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피해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초 4~6학년: 36.0%, 초 1~3학년: 17.6%). 가해학생 중에서도 58.0%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0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총 심의건수 중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9%수준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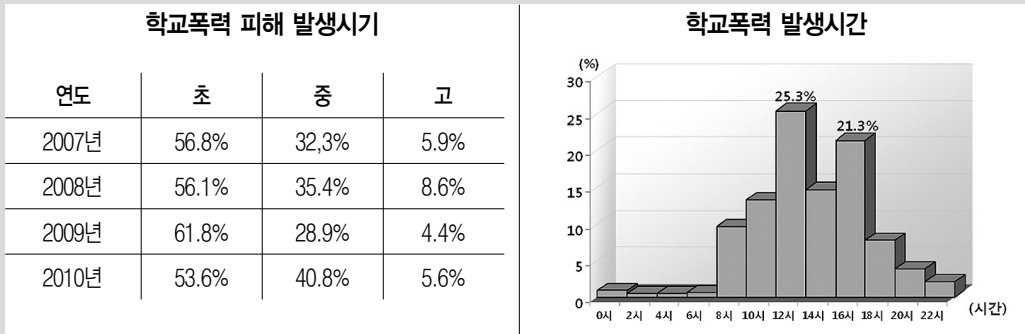
학교폭력 발생 장소는 ‘학교 내’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빈번하였다. 피해를 당하는 장소는 학교 교실, 복도, 화장실 등 ‘학교 내’ 비중이 높으며, 피해를 당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시간 등 ‘학교생활 중에 발생’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해행동의 원인 및 가해학생 처분

학교폭력의 원인 즉 가해이유로는 ‘장난’(1

5)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0),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 2. 학교폭력 발생시기 및 시간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07, '08, '09, '10)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 학교폭력! 유·초등학교 단계부터 조기예방 강화

위),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 (2위), '오해와 갈등' (3위)로 분석되었다. 그 외 이유로는 '화가 나서', '이유없음', '스트레스 때문에' 등이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남학생의 경우 '장난' (30.9%), '상대학생이 잘못해서' (22.3%) 이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 (23.4%), '오해와 갈등' (19.8%)이 높았다. 학교급별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5학년은 '상대학생이 잘못해서' (38.0%)가 높은 반면에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장난'이 가장 높았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등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가해학생들은 대부분 선도처분으로 교내봉사 조치를 받

은 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서면 사과 순으로 많았다.⁶⁾ 덧붙여 대부분의 가해자는 선도처분 후에도 대부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5) 피해학생의 대처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처방법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7.5%, 237명)가 '요청하는 경우' (42.5%, 175명)는 그에 비해 낮았다.⁷⁾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1위),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2위), '보복당할 것 같아서' (3위) 등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한 피해학생들은 대부분 보호조치 중 '심리상담'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에는

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학교폭력현황」 <http://www.opengirok.or.kr/>

7)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0).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학생 11,733명 중 심리상담을 받은 학생이 8,791명(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조치를 받은 학생은 1,301명(11%),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은 589명(5%), 일시 보호를 받은 학생은 497명(4%)이었다.

6) 목격학생의 대응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의 대응을 살펴보면 학생 중 대다수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모른척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폭력 목격 시 대응행동에 대한 질문에 ‘모른척한다’는 응답은 2007년 35%에서 2010년 62%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학교폭력을 보고 나서 신고하지 않은 하는 이유로는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 (27.5%), ‘관심이 없어서’ (24.6%),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⁸⁾

표 3. 연도별 학교폭력 심각성 인지도 및 목격 시 대응행동

연도	목격 시 모른척함(%)	심각성 인식도(%)
2007년	35.0	-
2008년	53.1	28.6
2009년	56.8	32.8
2010년	62.0	38.1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07, '08, '09, '10)

3. 학교폭력근절 대책⁹⁾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여러 부처·기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시행되었으나 폭력발생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게 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들어 학교폭력의 잔인성이 심각해지고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2월 범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근절 7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총 7가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직접 대책’은 4가지로 학교폭력 발생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고 ‘사소한 괴롭힘’에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의미에서 마련되었으며 ‘근본대책’은 3가지 대책으로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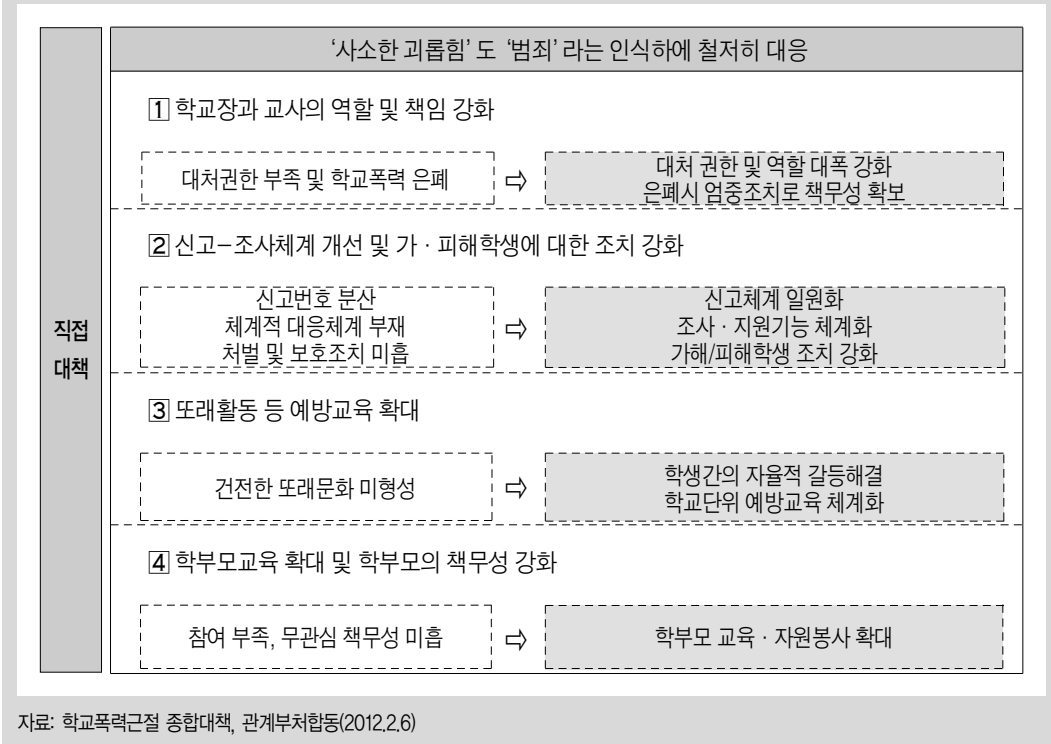
1) 직접 대책

직접대책은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강화」, 「3. 포괄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이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8)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0),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9) '12.26 발표된 교과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2. 학교폭력 직접 대책



먼저 교과부는 학교장과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 권한 부족 및 학교폭력 은폐를 예방하기 위하여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급당 30명 이상인 중학교 2학년부터 복수담임제를 도입하여 학생들과 밀착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기존의 학교폭력 신고번호가 교과부의 1588-7179, 여가부의 1388, 경찰청의 117 등 각 기관에 산재하여 신고자의 혼란이 가중되

는 것을 근거로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를 제안하였다. 신고 대표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여 24시간 운영하며 접수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사건을 이송하는 신고 체계를 구축하였다(그림 3 참조).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를 지원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체계화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3. 학교폭력 신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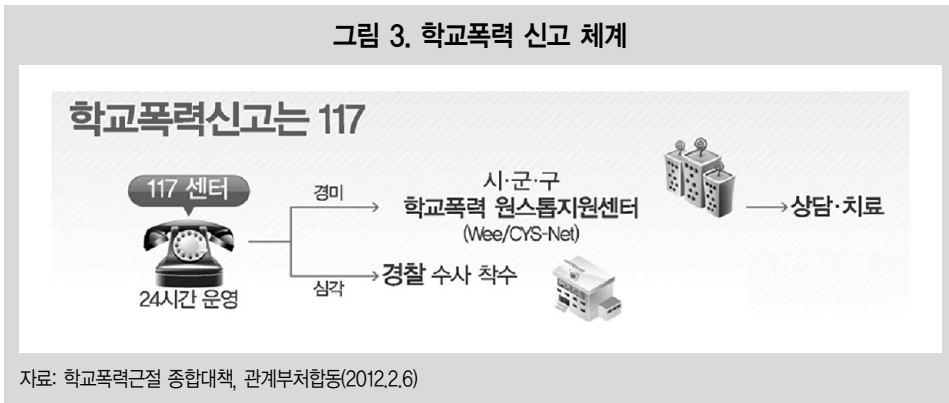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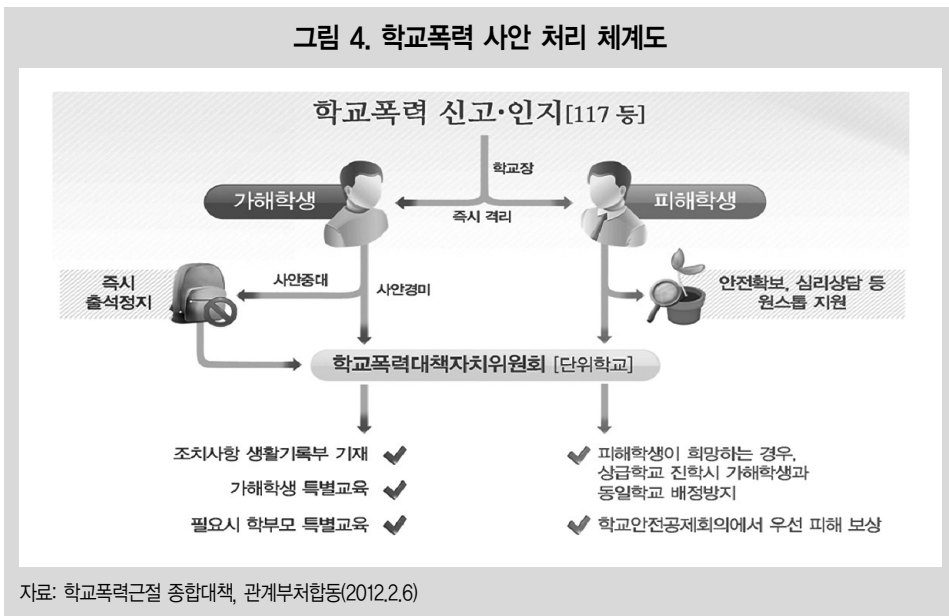


그림 4.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도



세 번째 직접대책인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는 또래상담·중재·조정프로그램, 자치법정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 1회 모든 학생 대상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 후 고위험 학생을 치료하는 대책이다. 나아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 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용,

관리자용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사이버 상담을 강화하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 직접대책인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에서는 학교·교육청·민간기업 등 모든 학부모가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근본대책

근본대책은 「5.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7. 게임·인터넷 심의·규제 및 예방·치유교육 확대」이다. 주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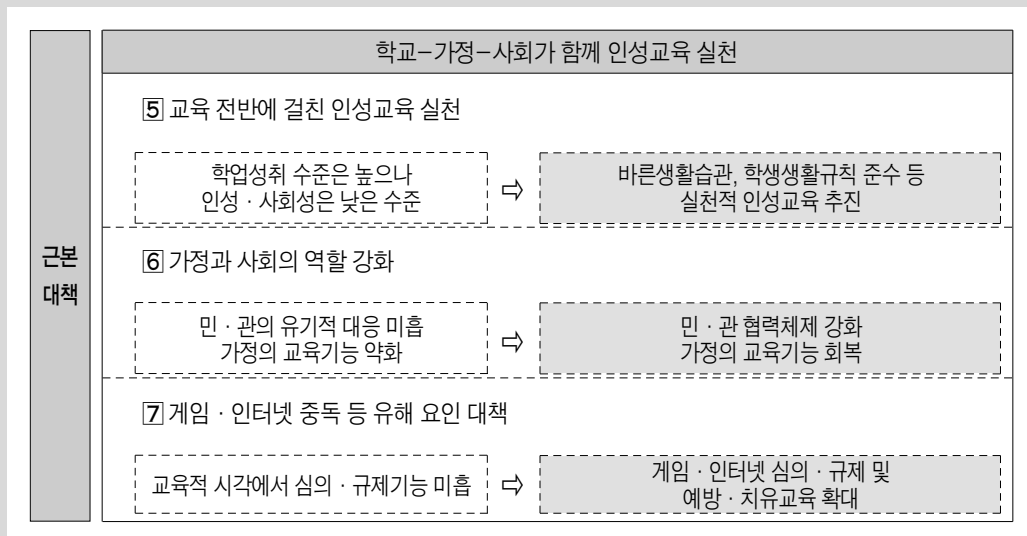
먼저 「5.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은 3~5세 누리과정에서부터 질서·나눔·배려·협력등을 철저히 지도하고 정규 교과 내 인성교육을 강조하여 지식중심에서보다 사례중심의 학습으로 개편하는 대책이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높은 중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주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확대하고 전국 중학

교에 토요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며 예술·독서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다음으로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는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수요일 정시퇴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가족사랑의 날’인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며 확장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7. 게임·인터넷 심의·규제 및 예방·치유교육 확대」 대책으로 주 내용으로 게임 인터넷 중독방지를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 경과시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제(Cooling Off)를 도입한다. 나아가 전국 초중고생 종합 실태조사(12.4~12월)를 통해 게임·인터넷 중독

그림 5. 학교폭력 근본대책



자료: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2012.2.6)

징후가 있는 학생을 선별·단계적 치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한계

이번 학교폭력근절 대책은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의 한계를 다각도로 보완하였다. 인성교육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교과별로 인성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고체계 및 학교폭력사안 처리과정을 보다 체계화하여 학교폭력발생 후 학생, 교사, 학교, 경찰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 가해자 처벌에 집중된 대책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즉시 출석 정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징계 사항 기록, 강제전학 등을 제시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하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학교폭력 발생을 낮추고 가해학생의 교화에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201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가해 행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65%)’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처벌’은 가해행동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¹⁰⁾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은 “가해학생들은 자기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몰라 폭력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등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¹¹⁾

학교폭력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형성, 발생과정, 심화 및 악순환 등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때 단순히 가해학생의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가해학생의 정신건강 문제 및 인성교육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현실성·실효성이 부족한 대책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복수담임제’와 ‘일진경보제’ 등 일부정책은 현실성 및 실효성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복수담임제의 경우 ‘정담임’과 ‘부담임’의 역할이 모호하다. 정담임이 ‘전체적인 학급관리’를, 부담임이 ‘정담임이 지도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관리’ 등을 맡도록 예시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학교 자율에 맡긴 상태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 사이에 반목과 불협화음이 빚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교사 수급 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다.¹²⁾

10) 한겨레신문, 「학교폭력 예방 정부대책 겹도는 이유 있다」 2012년 4월 18일자 보도자료

11) 한겨레신문, 「학교폭력 예방 정부대책 겹도는 이유 있다」 2012년 4월 18일자 보도자료

12) CNBNEWS,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일선교사들 현실성...」 2012년 2월 6일자 보도자료

또한 직접대책의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강화」 대책 중 하나인 일진경보제는 일진이 성인 폭력조직과 달리 포착이 어려우므로 학생들의 인식을 기초로 이진 존재 여부를 탐색하여 대응하는 방안이다. 즉 일진 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무기명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표본 조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동일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는 경우 일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진 경보'가 발령되고, 학교폭력 조사 담당자와 상담 전문가 등이 개입하는 대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실제 학교폭력 감소에 영향을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마지막으로 상담교사 확충 계획도 담겼지만, 수적 확대뿐 아니라 상담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상담 시간 확보 방안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¹³⁾

3) 방관자에 대한 역할 없는 대책

2010년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척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62%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이 교실 안 동급생간의 공동체 생활이라고 할 때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이분법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방관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

소장은 “한 교실 또는 한 학교가 따돌림에 가담해 다수의 방관자·방조자가 있는 ‘왕따’ 문제에는 정부의 대책도 통하지 않는다”며 “모든 학생이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는 교실 안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가해학생도 피해학생도 왕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¹⁴⁾

이에 따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여 잠재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돕고,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는 역할 등을 교육받아야 하며 교실 안 권력관계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4)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접근없는 대책

학력폭력에 대한 대책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근본대책은 근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접근이 취약하다. 즉,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주의, 학력제일주의, 물질주의, 서열주의 등의 병폐로 인해 초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체 사회에 팽배한 이러한 문제가 아동·청소년 사회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기제로써 폭력을 선택한다. 아울러 저출산시대에 친구가 전부인 상황에서 관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할 때 심한 좌절이 생기고 이를 폭력으로 푸는 상황이

13) 문화일보, 「백화점식으로 늘어났지만.. 글썽 확 와 닿는게 없다」 2012년2월 6일자 보도자료

14) 한겨레신문, 「학교폭력 예방 정부대책 겹도는 이유 있다」 2012년 4월 18일자 보도자료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집적되어 나타난 학교폭력문제는 그러므로 보다 심층적인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과 병리의 원인접근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소결

지난 몇 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우려할 수준으로 점차 심각화, 저연령화하고 있다. 초중고생의 12% 이상이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한 왕따, 피해자의 가해자화, 피해자 자살 등 학교폭력의 상황은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이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부는 이에 대한 긴급 대책을 여러 번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처럼 학교폭력을 줄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과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뿌리깊은 병리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성적제

일주의, 물질주의, 과도한 경쟁 등과 같은 논리가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적자생존'의 무서운 논리가 학생들 사이에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논리에서 뒤진 약자는 패자가 되고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괴롭혀도 되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교육이 지식만을 전달하고 직업을 구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하는 수단화 된데서 기인된다고 본다. 성인 사회에서도 이러한 적자생존 논리가 자리잡아서 이를 차세대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건강한 일반 학생문화가 약화되고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취하는 'Winner takes all'의 논리가 편만하다는데서 앞날이 매우 밝지 않다.

정부의 다양한 대책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사회의 병리적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인 차세대의 폭력은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차세대에 기성세대의 문제도 같이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본문
복사